



# 주간 통일정세

2013-2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군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51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포병 싸움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시에 훈련을 강화해 모든 포병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참관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박태성·황병서 노동당 부부장, 홍영칠,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상장(우리의 중장), 주도현 중장(우리의 소장), 림광일 소장(우리의 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일성 사망일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 박차(7/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2면 상단에 주민들 속에서 환하게 웃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배치하고 2면 전체에 걸쳐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아버지'란 제목으로 여러 꼭지의 김 주석 관련 일화를 실었으며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넘쳐나는 조국강산'이란 제목으로 4면 대부분을 김 주석을 추억하는 각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데 할애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전승기념관·인민군열사묘 시찰(7/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일:7월 27일)에 완공 목표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하 전승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이번 시찰에는 최휘 노동당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홍영칠,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군 장성인 박정천·주도현 등이 수행함.
  
- **'7·4공동성명은 김일성 업적' 선전(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자주통일의 근본 초석을 마련해주시여'라는 글에서 "7·4공동성명의 채택은 실로 나라의 통일위업 실현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고귀한 민족애, 불멸의 노고와 헌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찬양함
  - 신문은 김일성 주석이 1972년 5월 방북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인민군열사묘·과학자살림집건설장 현지요해(7.3,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미평협동농장(강원도 통천군) 현지 요해 및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방문(7.1,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내각 총리),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건설현장 요해(군인 건설자들 고무) 및 평양 학습장공장(현대화 정형 요해) 방문(7.4,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강원도 세포등판 개간전투장 현지 요해(7.5, 중통·중방)
  - 강원도 세포군 리목리와 현리를 돌아보고 군인들이 조성한 인공 풀판과 먹이풀 비배관리 실태 요해
- 박봉주(내각총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순천화학연합기업소·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생산정형 현지요해(7.6, 중통·중방)

#### 나. 사회·문화

##### ● 北, 젊은층 사상교육 강조... "전승의 역사 기억하자"(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반미공동투쟁월간(6월25일~7월·27일)'을 맞아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신문은 '반제반미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세대', 즉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에 대한 반미·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계급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설이나 영화로만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한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반제 계급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전승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로만 남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 北도 장마 시작... 일부 지역 200mm 폭우(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됐다"며 "2일 중부 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방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폭우가 내렸다"고 전함.

##### ● 北 "병진노선 관철 위해 과학기술 발전 절실"(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당의 영도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병진노선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새 시대는 일군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힘.
- 신문은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먼 앞날의 일이나 남의 일처럼 여기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은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눈앞의 일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함.

- "큰물 피해 막자"…北, 장마철 수해 대책 독려(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농촌경리부문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자는 기획성 기사 5건에 5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함.
  - 신문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세운 피해방지대책'이라는 기사를 통해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지난겨울 강 폭을 2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금야강에 있는 발전소의 독을 이용해 여러 하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선전했으며 평안남도 문덕군과 평안북도 운전군의 협동농장에서는 하천의 독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낮은 곳에 있는 논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있는 논두렁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전함.
  
- 북한 올해 아리랑공연 초점은 '정전협정 60주년'(7/5,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준비위) 김금룡 책임연출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아리랑 공연이 6·25 전쟁 당시 '군사적 기적'을 창조한 김일성 주석의 '전승 업적'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준비위 관계자와의 문답을 통해 올해 공연은 김일성 주석이 1953년 전승열병식 광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육성녹음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전함.
  
- '과학자 우대하라'…北 김정은, 과학자 처우 개선(7/5,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당의 영도 따라 과학기술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과학자·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과학연구사업은 절대적인 시간과 집중적이며 중단없는 사색과 탐구를 요구한다며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잡다한 과제를 내리 먹이거나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쿠바 방문 北 김격식 총참모장, 양국 우호관계 강조(7/1, 미국의소리(VOA))
  - 쿠바를 방문 중인 북한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달 28일 쿠바 독립전쟁을 이끈 안토니오 마세오 기념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를 '참호를 함께 쓰는 사이'로 표현하며 양국 간 밀접한 우호관



계를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일 전함.

- **올 1~5월 북중 교역액, 작년 비해 2.3% 감소(7/2, 미국의소리(VOA))**
  - 올해 1~5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약 24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1억1천77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은 13억3천515만달러로 작년보다 8.5%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 교역액이 작년보다 줄.
- **미국 농무부 "北, 아시아서 식량상황 가장 심각"(7/2, 연합뉴스)**
  -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3~2023'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식량 상황이 불안정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북한을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보고서는 그동안 북한 농업에서 부족한 자원과 부적절한 정책이 식량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으며, 1990년대 초 매년 750만t을 넘었던 연간 곡물 생산량이 2012년에는 430만t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힘.
- **北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중국 방문(7/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김성남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표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 선수단,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7/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학생 선수단이 러시아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의 전극만 내각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학생 체육협회 위원장이 대표단 단장이라고 전하면서도 대표단의 규모와 참가 종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북한-쿠바, 아바나서 군사회담...관계강화 방안 논의(7/2, 조선중앙통신)**
  -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전영진 쿠바 주재 북한대사 등이 포함된 북한 군사대표단과 레오폴도 신트라 파리아스 쿠바 혁명무력부 장관 등이 포함된 쿠바 군사대표단이 지난달 30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북한 "납치문제 완전해결"...일본 "항상 하는 말"(7/2,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측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항상 하는 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 보도함.
-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북한 노동자 1천749명 몽골서 취업(7/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몽골 노동부를 인용해 정식 취업허가를 받고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지난 4월 기준으로 1천749명에 이르고 보도함.
  - **北-몽골, IT 교류협력 협정 체결(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소프트웨어총국의 강영준 총국장과 몽골 정보기술·우편·통신국의 차간-어부건 자담바 국장,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몽골 특명전권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과 몽골이 정보기술(IT) 분야의 교류와 협조와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北, 케네스 배씨 특별교화소 생활 공개...종일 농사일(7/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배 씨가 수감된 특별교화소를 직접 방문한 후 썼다는 기사에서 "배준호는 아침 6시에 기상해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동하고 있다"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전함.
    - 배 씨는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조속히 좋은 조치가 공화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면 요청을 공화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함.
  - **北인권관련단체, 제네바서 강제송환 청소년 귀환 촉구(7/4, 연합뉴스)**
    -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대표들과 탈북자 김은철씨는 4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정문 앞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과 거주선택의 자유 허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WHIG)의 현지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이들은 북한대표부 우편함에 직접 넣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귀하'로 시작되는 서신을 통해 지난 6월 라오스에서 남한행을 시도하던 9명의 청소년 탈북자들의 송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그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가세...작년 7천900만 달러(7/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4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3 세계투자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7천900만 달러로 2011년 FDI 순유입액 5천600만 달러보다 41% 증가했다고 보도함.
    - 북한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2009년 200만 달러에서 2010년 3천800



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으나, UNCTAD 보고서는 북한보다 FDI 유입액이 적은 나라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와 오세아니아와 카리브해 연안의 일부 작은 나라들밖에 없다고 밝힘.

● **美, 케네스배 건강 우려...즉각 석방 거듭 촉구(7/4, 연합뉴스)**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배씨(케네스 배)의 인터뷰 기사 사 진을 보았으며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했다"고 말하 고 "이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는 북한 당국이 배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방중 김성남 북한 부부장, 왕자루이 면담(7/4,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부부장이 이들과 회동에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교류 강화 문제를 논의했거나 김 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다고 관측함.

● **프랑스, NGO 통해 50만달러 상당 대북 지원(7/5,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정부가 올해 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 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 가 지원한 20만 유로(26만5천 달러)를 이용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 을 지원하고 다른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도 프랑스 정부가 올 1 월 지원한 19만 유로(25만 달러)를 사용해 북한에서 식수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음.

■ **기타 (대외 일반)**

- 美 육군 23화확대대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北)를 대상으로 생 화확전을 벌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재차 비난 (7.1,평방)
- '美 해외주둔 해병대기지가 日 오키나와에 대부분 주둔(총20개 중 13개 주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北)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나가 아시야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 (7.3,중통·노동신문)
- 北 ↔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 사이의 회담, 7.4 모스크바에서 진행 (7.5,중통·중방)
- 이날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과 러시아 외무성 부상('이고리 모르 굴로브')이 협상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장관들은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의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평화적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 북한 김계관, 러시아 측과 5시간 회담(7/5,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과 무려 5시간에 걸쳐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이 김 제1부상과 면담했으며,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과 김 제1부상 간 협의도 있었다"며 "회담에서 양측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 또한 "러시아 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황 안정화가 실용적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현저히 활성화하고 대규모 다자 경제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고 밝힘.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 北, 차대통령 訪中 발언 비난... "용납 안될 중대도발" (7/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했던 대북 발언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방중기간에 "'새로운 남북관계니, '새로운 한반도'니 하면서 우리에게 대해 또다시 '변화' 타령을 했는데 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정권"이라며 주장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반공화국 국제공조로 우리 체제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며 "우리는 박근혜에 대해 지금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 北,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거듭 요구(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의 암적 존재'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은 유엔군사령부의 외피를 쓴 남조선 강점 미군에 있다"



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함.

- 신문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하면서 "미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그를 이용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 도발에만 매달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며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함.

### ● 北, 대남 비난 지속... "南,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 (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말과 행동이 판이한 위선자들의 몰골'이라는 논평에서 "류길재가 저들은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 듯이 사태를 왜곡한 것은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라며 남한 당국이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핵 포기', '변화'와 같은 '대결신호'라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민족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의 신호를 되받아넘기면서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것이 '대화'를 바란다는 남조선 당국의 진짜 몰골"이라고 비난함.

### ● 北 박의춘, ARF서 '6·15와 10·4선언 이행' 언급 (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박 외무상이 전날 브루나이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변함없는 입장에서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 北,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 "개성공단 방북 허용" (7/3, 연합뉴스)

- 북한은 3일 오후 5시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측에 보내는 문건에서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북한은 또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화하지는 우리측의 문제 제기에 호응, 이날 연락관 접촉 뒤 오후 5시 30분께 이뤄진 양측간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짐.

### ● 北 "7·4공동성명 조국통일 3대원칙 지켜야" (7/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 통일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포는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7·4공동성명의 계승발전이라고 규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새 세기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밝힘.

- 신문은 현재 남한의 집권세력이 '반공화국(반북)대결소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교훈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무시하며 그와 배치되게 행동하면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중당에는 핵전쟁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회의록 공개 또 비난…"정상외교 진정성 민겠나"(7/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초보적 신의도 없는 정치불한당들의 자살적 행위"라고 거듭 비난함.
  - 통신은 '벌거벗고 세상천하에 나선 정치무뢰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행위는 "청와대의 개입과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한의 집권세력이 국정원의 대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기 위해 극비문서 공개를 주패장(카드)으로 쳐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실무회담 앞두고 '우리 민족끼리' 강조(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5일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외세의존 행위란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지면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南北 6·15실천위, '8·15 공동행사' 개성 개최 추진(7/5,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및 해외 측 위원회가 광복절 68주년 기념행사를 개성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와 북측위, 해외측위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6·15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합의 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5일 발표함.
- **北신문, 차대통령 '진정성 대화' 발언 비난(7/6, 노동신문)**
  -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린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언급한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대결기도를 감추기 위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



론, "상대방의 정책노선을 익달하게 헐뜯는 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힘.

- **北노동신문, 윤병세 외교장관 비난..."외세 의존 추태"(7/7,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핵 포기'를 강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난함.
  - 신문은 '외세의존적 본성을 드러낸 추태'란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있는 아세안지역연단 상(장관)회의 기간 윤병세는 북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달라고 여러 나라에 목 쉬도록 간청했다"라며 "동족대결에 환장해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역겨운 추태"라고 전함.

####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서 개최(7/5, 연합뉴스)**
  -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북측이 오늘 오후 8시25분께 통보해 왔다"고 밝혔으며 합의에 앞서 남북은 실무회담 개최 문제에는 쉽게 의견을 모았으나 장소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음.
  - 북한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등 3명이 대표로 회담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우리 측은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함.
- **북한 여자축구 동아시안컵 참가 확정...8년 만에 방한(7/5, 연합뉴스)**
  -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20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7일 "여자 대표팀을 대회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해온 데 이어 우리 정부가 5일 북한 대표팀의 방한을 승인했으며 대표팀은 베이징에서 떠나는 인천행 항공편을 이용해 18일 입국함.
- **동해상서 조난 北주민 3명 구조...판문점 통해 송환(종합2보)(7/5, 연합뉴스)**
  -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주민 3명이 우리 측 선박에 의해 구조된 뒤 5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은 지난 3일 오전 동해상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다가 선박이 전복되면서 조난을 당했으며 때마침 인근 수역을 지나던 우리 측 민간 화물선이 이들을 발견, 무사



히 구조한 뒤 신병을 해양경찰에 인계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함.

- **北 청소년 축구대표팀, 조총련 대표팀과 연습경기(7/6, 조선신보)**
  - 북한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고위간부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 하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청소년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가졌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전함.
  - 신문은 "재일조선 청년 학생 축구대표단이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조국(북한)을 방문해 16세 이하, 19세 이하 조선(북한) 대표 선수들의 추가 실력 점검을 겸한 경기에 출전했다"고 밝힘.
  
-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10일 방북해 설비점검(종합)(7/7, 연합뉴스)**
  - 남북한은 7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준비가 되는데에 따라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한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데도 합의함.
  - 양측은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기로 함.
  -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기로 함.
  - 남북 양측은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함.
  
- **北, 남북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 신속 보도(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4시께 판문점에서 채택된 남북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을 3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오전 7시 29분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다며 "회담에서는 남측 기업의 장마철 피해를 줄이고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힘.
  - 또한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업지구사업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4개항의 합의서 전문을 공개함.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중·일 '北 비핵화' 압박...방법론은 온도차>(7/1, 연합뉴스)
  -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재확인된 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은 1일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북한을 압박했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에 도착한 4개국 장관들은 이날 연세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음.
  - 그러나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강조하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여전히 우선시하는 모습도 보였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브루나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공조방침을 재확인했음.
  - 세 장관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별도의 미중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 케리 장관은 회담 뒤 "왕 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중국과 함께 약속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진지함을 강하게 재확인했다"면서 "이제 비핵화 그 자체를 통해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케리 장관은 "중국은 이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매우 확고한 말과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을 내게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음.
  - 케리 장관은 "한·미·중·일 4국은 북한과 관련한 미래에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완전히 일치돼 있고 완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해 게임 플랜을 벼랑 끝 전술에서 평화 공세로 바꾸고 6자회담 당사국에 북한에 대한 공조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북중 회담 뒤 "중국 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우리 입장을 북한을 비롯해 각국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왕 부장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의장국으로 (참가국을) 중재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도 기대했음.

- 그는 "중국은 유관국이 서로 각자 행동에 나서고 조건(여건)을 만들어 한반도 문제가 빨리 대화를 통한 해결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북한은 이날 중국과의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핵 군축회담 입장을 거듭했을 것으로 관측됨.
- 박 외무상을 수행한 리홍식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ARF 회의가) 끝나고 해야죠"라고 언급, 2일 ARF 회의 후에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 나. 미·북 관계

##### ● <케리, '조건부 북미 관계정상화' 언급 눈길>(7/2, 연합뉴스)

-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조건부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음.
- 1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3국 외교장관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더 좋은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이 더 좋아질 것이며, 남북한은 물론 북한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연관돼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이른바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하면 미국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국무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대표적인 '협상론자'로 유명했던 그는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당시 직접 리 부상을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음.
- 케리 장관은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도 재확인했음.
- 그는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약속했던 북한의 핵 폐기 조치의 이행과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비핵화를 열거했음.
- 페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자신과 만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확고



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 <北,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거듭 요구>(7/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암적 존재'라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의 암적 존재'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은 유엔군사령부의 외피를 쓴 남조선 강점 미군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신문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미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그를 이용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 도발에만 매달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며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엔사 해체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요구했음.
-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선희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음.

● <北 박의춘 외무상 "美,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7/2, 연합뉴스)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2일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의 격화와 악순환을 끝장내고 평화와 안정 수행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전제조건없이 우리의 선의와 용단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 수용을 촉구했음.
- 박 외무상은 이날 반다르스리브가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얼마전 우리는 조미(북미) 사이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 박 외무상은 "조선반도 정세가 이리 악화되고 있는 근저에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정책이 깔려있다"면서 "장본인인 미국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음.
- 그는 "이런 적대 정책이 청산되지 않고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 해결도 힘들 것"이라면서 "유엔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조선 비핵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법무도한 그것을 끝까지 배격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9·19 성명에는 6자가 수행해야 할 일이다 기재돼 있는데 미국, 남조선, 일본은 이행하지 않고 우리보고 이행하라는 것은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했음.
- 이밖에 그는 추가 핵실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강경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번 회의 기간 미국측과 "만남 적 없다"고 답했음.
- 최 부국장은 또 남북대화화 관련, "우리가 제기한 북남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파탄시켰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대화와 협상에 조금도 미련을 가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이미 조일(북일) 평화선언에 따르는 우리의 진지하고 선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음.

● <“북한 한성렬 후임 장일훈 부임…뉴욕채널 담당”>(7/4,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연락 창구인 '뉴욕채널'의 북한 쪽 담당인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후임으로 미국통이 아닌 다자외교 전문가인 장일훈 전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이 최근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 후임 차석대사는 미국 정부의 비자를 받아 최근 뉴욕에 도착했으며 한성렬이 그동안 맡은 뉴욕채널 업무도 관장할 것으로 전해졌음.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한성렬 차석대사가 평양으로 돌아간 뒤 그의 후임이 뉴욕에 부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후임자 역시 뉴욕채널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통상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에는 '미국통'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북미 협상이나 핵협상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보낸 것이 특징"이라면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추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장 전 과장은 2009년 3월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탄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 일 뿐 아니라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라고 주장했던 인물임.
- 북한이 최근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화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뉴욕채널의 미국 쪽 담당이었던 클리퍼드 하트 미국 측 6자회담 특사가 최근 홍콩 총영사로 내정된 뒤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뉴욕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뉴욕채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던 2009년 가을부터 한성렬 차석대사와 하트 특사를 중심으로 운용됐던 비공식 외교 채널임.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미국의 대북 식량(영양) 지원을



골자로 한 지난해 2.29합의 도출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음.

-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미국 정부와의 직·간접 접촉 업무를 맡고 있음.

● <미 국무부 "북한 억류 케네스 배 건강악화 우려">(7/4, 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가 북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한에 배 씨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했음.
- 국무부의 한 관리는 3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배 씨의 인터뷰 영상을 봤다며, 해외의 미국 시민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라고 강조했다.
- 이 관리의 배 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지난 5월 21일 배 씨를 마지막으로 면담했으며, 그 이후로도 배 씨에 대한 영사 접근을 북한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이 관리의 또 국무부가 배 씨 문제와 관련해 현지 스웨덴 대사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배 씨의 가족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북한은 3일 케네스 배 씨의 수감 생활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한 배 씨는 석방을 하고 회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음.
- 배 씨는 인터뷰에서 생전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지병이 도졌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70살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음.
-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15일 케네스 배 씨가 전 날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면서, 배 씨가 4월30일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음.
- 이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측은 배 씨를 6번 면담했으며, 배 씨가 특별교화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한 차례 접견이 이뤄졌음.

● <미국 "北과 대화수단 있다"...장일훈, 대미협상도 참여">(7/5, 연합뉴스)

- 북미 간 연락창구인 '뉴욕채널'의 북한 측 담당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에 장일훈(54) 전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이 최근 부임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수단을 갖고 있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음.
- 스키 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지역내 관련국들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필요한 압력을 가하는데 있다"면서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에서 펼쳐진 존 케리 국무장관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한 협의 내용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문제(대북 정책)에 주력하고 다양한 대화를 진행



- 할 수 있는 충분한 팀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음.
-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뉴욕채널의 미국 쪽 담당이었던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최근 홍콩 총영사로 내정된 뒤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과의 필요한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북한의 장 차석대사는 다자외교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과거 외무성에서 미국국에도 근무하는 등 미국에도 밝은 인물로 알려졌다.
  - 그는 평양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평양외국어대학을 다니던 중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유학했음. 그와 함께 유학한 인물에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김명길이 있음.
  - 장 차석대사는 유학 후 외무성 남미국에서 근무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서기관으로도 일했으며, 1989년부터 미국국으로 자리를 옮겨 말단 지도원부터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고, 이후 국제기구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영어에 능통한데다 신중하며 말이 없는 전형적인 외교관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 탈북자가 전했다.
  -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협상 과정에도 실무자로 참여했으며, 2000년 매 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음.
  - 현지 소식통은 4일 "장 차석대사가 미국 업무에도 정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뉴욕채널의 무게감은 전임자인 한성렬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일훈의 아버지는 북한 국가안정보위부의 중간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 다. 중·북 관계

- <북한도 ARF 외교전 돌입...박의춘, 中과 양자회담>(7/1,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1일 숙소인 엠파이어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했음.
  - 북중 양국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룡해 특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중국에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북한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밝혔을 것으로 보임.
  - 박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차원의 대화도 강조했다. 최근 '대화 공세'에 나선 북한은 자신들만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미국 등에 사실상 핵군축 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전날 브루나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 외무상은 이날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음.



-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분명한 입장이 있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한·미·일과 달리 조속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박 외무상은 회담 뒤에도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음.
- 박 외무상을 수행한 리홍식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ARF 회의가) 끝나고 해야죠"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북한이 2일 ARF 회의 후에 기자회견이나 구두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지난해 ARF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인공위성의 발사는 합법적이고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음.
- 박 외무상은 중국과의 양자회담에 이어 러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몽골 등과 양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라. 일·북 관계

##### ● <"일본, 이지스함 2척 추가 도입 검토">(7/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도입, 이지스함 태세를 8척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 일본은 현재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배치중이며, SM3를 탑재하지 않은 이지스함 2척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중임.
- 이지스함 증강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태세가 장기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지만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이지스함 1척은 약 2천억엔(약 2조2천800억원) 정도로, 추가 도입되는 이지스함 2척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계약, 2020년까지는 배치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연내에 책정할 새 '방위계획 대강'에서 미사일방위(MD)태세 강화를 내세울 방침임.
- 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의 신행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대비,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했을 때 SM3 탑재 이지스함 4척 중 2척이 수리중이어서 이지스함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마. 러·북 관계

##### ● <"러시아, 핵프로그램 중단 문제 놓고 북한과 협의">(7/1, CNN)

-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다음주 러시아 관리들을



만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의 핵프로그램 종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러시아 외교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그리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만날 이번 회담은 목요일인 4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논쟁거리인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왔음.
-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은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두 달 후의 지하 핵실험 이후 더욱 확대되었음.
- 추가적인 제재와 처벌 조치에 대항하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폭넓게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상황은 변하고 있음. 특히, 이달 초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주장하며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고 이 통신사는 전했다.
- 한편, 최근 북한은 김계관 제1 부상을 통해 베이징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한편, 관리들을 중국에 급파,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장예쑤이와 공동으로 모든 관련국들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음.

#### ● <北 김계관 제1부상 3일 모스크바 도착>(7/4, 연합뉴스)

-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음.
- 김 제1부상은 베이징발 모스크바행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을 이용해 이날 오후 3시 55분(현지시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내렸음.
- 그는 이어 공항 귀빈실로 이동해 마중 나온 김영재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 러시아 외무부 인사 등과 약 10분 동안 환담한 뒤 오후 4시 10분께 밖으로 나왔음.
- 김 제1부상은 그러나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어떤 일로 러시아에 왔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업차 왔다"고 짧게 답한 뒤 차문을 닫고 곧바로 출발했음. 그는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됨.
- 김 제1부상은 4일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관저에서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 등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러 양자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르굴로프 차관은 하루 전 러시아 기자들에게 "김 제1부상과 만나 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러시아는 줄



곧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틀이라는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 김 제1부상은 러시아 측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설명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미국일본한국 등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계국간 회담을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러시아-북한, 핵문제 이전 여전히 남아”>(7/5, 연합뉴스)

-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하루 전 회담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아직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일련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양국의 입장이 갈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모르굴로프 차관은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하루 전 열린 러시아-북한 외무당국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는 "(북측과의) 협의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이었다"면서 "양측은 모두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협상 재개의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간 협의가 계속될 것이며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러-북 외교 당국자 간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 측과) 김제1부상의 대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러시아는 이 같은 협의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물론 이것(6자회담 재개)은 북한의 입장과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제시한 요구조건들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지 여부가 6자회담 재개의 관건임을 지적한 것임.
- 그는 6자회담 재개 가능 시점과 관련 "아직 이에 대해 추정하기는 아주 어렵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빨리 재개될수록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긴장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모두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3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이튿날 모르굴로프 차관 등 러시아 대표단



과 무려 5시간에 걸쳐 회담한 김 제1부상은 5일 러시아 하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6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바. 기 타

### ● <北 고립' 확인한 ARF...6자회담까진 갈 길 멀어>(7/3,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전원 참석한 아세안(ASEAN) 연례 외교장관 회의 일정이 공식 종료됐음.
- 이번 회의는 사실상의 비공식 6자회담과 다름없었지만 국제사회의 '北 비핵화' 충의를 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별로 없었음.
- 올해 ARF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외교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무대로 평가됨.
-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2일 밤 채택한 ARF 의장성명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주장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함.
- 의장성명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는 내용을 포함,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 북한은 박의춘 외무상 발언을 통해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음.
- 27개국이 참여한 이번 ARF 회의는 최소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26개국과 북한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26대 1'의 구도가 됐음.
- 6자회담 참가국 외교수장들은 회의 기간 양자 또는 3자 형식의 연쇄접촉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놓고 직·간접 조율을 벌였지만 한·미·일과 북한 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음.
- 한·미·일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음.
- 미국은 ARF 회담 직후 북핵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한·미·일에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은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옴. 미국의 강경한 입장 탓에 북미대화 카드가 막혀버린 북한은 러시아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파견하는 등 틈새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할 경우 여름이 지날 때까지 구체적인 대화 국면의 진전은 없을 수도 있음.
-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대화 전술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도발 사이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위비협상 10월까지 타결... "50% 분담" 요구> (7/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될 수 있으면 오는 10월까지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하지만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논리가 맞서고 있어 조기 타결 여부는 불투명함.
  -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미국 국무부 조지 마셜센터에서 시작된 1차 협의에서 국회 비준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한국의 제안에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 이 당국자는 "한쪽이 성과를 얻으면 상대방은 뭔가를 잃는 제로-섬 형식의 어려운 협상이지만 한미 동맹 정신을 기초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 양국은 이날 첫 협의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와 분담금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 미국 측에서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음.
  -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됨.
  -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은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따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NPSC 개념이 한국의 직·간접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비율 합의에 대한 거부 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당국자는 "분모(NPSC 구성요소)나 분자(우리측 직·간접 기여 반영분)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합의가 안된 상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의 NPSC 개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40~45%에 해당하는 연평균 8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 왔음.

- 우리 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하지만 미국 측은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의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미국은 시퀘스티(정부예산 자동삭감) 사태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대신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분담금 증액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50% 이상의 분담률 증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4월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분담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분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측 논리가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윤병세, 美국토안보장관 면담... "사이버안보 협력"> (7/5,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재닛 나폴리타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면담 및 만찬을 하고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 새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윤 장관은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새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나폴리타노 장관도 적극 동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윤 장관은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중단된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대테러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윤 장관은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발로 추정되는 해킹 사태 등을 언급. 두 장관은 사이버공격이 국가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윤 장관은 이밖에 △한반도 정세 및 북핵 상황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 등을 언급했음.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는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북핵 불용의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 윤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관련된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면담에서 거론 여부를 고민했으나 NSA는 국방부 산하로 우리나라 안전행정부에 해당하는 국토안보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
- 정부는 외교채널의 다양한 레벨을 통해 미국측에 도청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미측은 아직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도청 문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언급
- 다만 윤 장관은 면담에 이어 장관공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도청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 4차 고위급 안보대화'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를 찾았음.

## 나. 한·중 관계

### ● <6·25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 급물살 탈 듯>(7/4,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중국 류옌둥 부총리에게 한국에 있는 중국군 유해 송환을 제안함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중국군 유해는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43구가 인도됐으나 이후로는 북측이 인수를 거부하면서 송환이 중단됐음.
- 북측은 군정위나 관문점 대표부를 통한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중국군 유해 송환 협의는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직접 이뤄질 가능성이 큼.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번 중국군 유해 송환도 군정위를 통하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엔군사령부가 동의하는 조건에서 한중간 양자 협의를 거쳐 송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중국이 박 대통령의 유해 송환 제안을 수용하면 조만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유해송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임.
- 중국군 유해는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적군묘지'에 360여구가 안장돼 있음.
- 적군묘지는 6·25 전쟁 이후 전국에 산재한 적군묘를 모아 1996년 현재 위치에 6천99㎡, 축구장 2개 규모로 조성됐음.
- 정부는 교전 중 사망한 적군 유해도 묘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당시 적군묘지를 조성했고 현재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 1천여구를 관리하고 있음.
- 적군묘지 조성 초기에는 유해가 100구에 불과했으나 국군 유해발굴 과정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도 추가로 발굴돼 적군묘지에 안장됐음.
-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유해발굴 때 중국군 유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박 대통령의 유해 송환 제안을 계기로 양국 간 유해 송환절차가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다. 한·일 관계

- <새정부 출범후 첫 한일 외교회담, 불과 25분>(7/1,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브루나이에서 약 25분간 양자회담을 했다.
  - 한일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일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져 늦게 시작하는데다가 한일회담 이후 다음 양자회담 약속이 있어서 예정보다 짧게 이뤄졌다.
  -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윤 장관이 방일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것임. 양국 외교장관 회담으로는 9개월만임.
  - 그러나 윤 장관이 방일을 취소할 때와 비교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회담을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 특히,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일 양국간 원·엔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당겼다'는 일본 각료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일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그 결과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빨라진 것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런 언급이 전해지자 정부 당국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제의를 일본이 먼저 해 온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회담 성사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일본과 전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상호 국가 방문은 부담이 있지만 다자회의 계기에는 하는 것"이라고 회담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 이날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은 모두발언부터 일본의 역사 인식문제를 작정하고 거론했음. 기시다 외무상도 아베 내각이 역사 문제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며 갈등을 봉합하려 노력했음. 그러나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안정될 것인지는 미지수
  - 이달 말 일본의 선거와 8월 15일을 전후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방위백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여전히 곳곳에 암초들이 많다는 점에서임. 우리 정부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본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정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9개월 만에 열린 것이고 이제 숨을 좀 돌리고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7월 선거가 끝난 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양국 관계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음.

#### ●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7/4, 연합뉴스)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9일 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2013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작년 백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음.
- 작년 방위백서 본문의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음.
-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게 되는 것임.
-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한 방위백서는 역사인식 문제로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한 작년 조치를 참고해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 이 외에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과의 갈등요인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음.
- 최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중국이 센카쿠 주변 수역에 정부 선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해침입, 영공침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음.
- 또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 취역,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장에 언급,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이라며 장비 보유현황과 국방예산 공개 등 군사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중국측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백서는 또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2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한층 더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소개했음.
-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정부 인식을 담고 있음.



- <아베 "역사인식을 정상회담 조건으로 삼아선 안돼">(7/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역사인식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각 나라가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역사인식 문제를) 외교카드화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아베 총리가 특정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한국을 향한 비판으로 풀이됨.
  - 중국 또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베 총리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중일 양국이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최근 가스전 채굴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경계심을 포출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음.
  - 아베 총리는 또 중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과 중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문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지않는 것은 외교자세로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 라. 미·중 관계

- <중국 해양감시선, 전속 경제수역서 미국 함정과 대치>(7/3, 연합뉴스)
  - 중국 해양감시선이 지난 6월21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순찰활동을 하던 중 미국 해군 소속 음향조사선과 일시 대치했다고 중국 남통망이 3일 보도했음.
  - 이 보도에 의하면 중국 해감선 5001호가 미 해군의 음향조사선을 발견한 곳은 남중국해 중국 영해로부터 100해리 떨어진 지역으로, 중국의 전속경제해역에 속함.
  - 중국 해감선 5001호는 미국 선박에 중국정부 허가 없이 전속 경제수역에서 불법적인 측량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즉각 떠나 달라고 요구했음.
  - 이에 대해 미국 음향조사선은 영해 밖의 공공해역에서 합법적인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음.
  - 중국 해감선은 계속 미국 선박과 대치하며 불법 활동금지를 요구하며 경고를 보냈음.
  - 환구시보 등 일부 매체들은 미국의 음향조사선이 정보탐지를 위한 '간첩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국 '간첩선'과 중



국 군함이 대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당시 중국은 해군 함정 등 선박 5척을 동원, 미국의 정보 수집 함정인 임페커블호의 항해를 방해했으며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었음.
- 약 4년 만에 다시 미국의 군함과 중국 선박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주변 해역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마. 미·일 관계

##### ● <日하시모토 "미군도 일본서 위안소이용" 망언 합리화 시도>(7/6, 조선일보)

-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번엔 "미군도 일본서 위안소를 이용했다"며 또다시 위안부 망언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며 "당시 세계 각국이 위안부 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망언을 해 국제적인 파문을 낳은바 있음.
- 하시모토 시장은 5일 오키나와 현 오키나와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가 두연설에서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기에 일본 정부가 특수위안시설협회(RAA)를 만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미군도 여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2차대전 패전 이후 점령군의 성범죄 대책을 명목으로 특수 위안시설협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 하시모토 시장은 또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현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두고 "미군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덧붙였다.

#### 바. 미·러 관계

##### ● <푸틴 "스노든, 미국에 해끼치지 않아야 망명 수용">(7/2,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망명 조건으로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음.
-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하다가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은 1일(현지시간) 현재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 9일째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가스수출국 포럼'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스노든 신병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만일 그(스노든)가 어딘가로 가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라"고 답했음.
- 푸틴은 곧이어 "만일 그가 이곳(러시아)에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미국 파트너들에게 해를 끼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을 중단한다는 한 가지



-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흥미로운 단서를 달았음.
-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여더라도 그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계속 결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음.
  - 그는 그러면서 "스노든이 스스로 인권보호자이자 인권운동가로 느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아마 그런(미국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머물 국가를 선택해 그곳으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푸틴은 "언제 그렇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음.
  - 푸틴은 이어 "스노든은 우리의 정보요원이 아니었으며 현재도 아니다"며 "우리 정보기관은 그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스노든이 이미 스스로를 전직 정보요원으로 느끼지 않으며 (소련시절의 반체제 인사)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같은 새로운 반체제 인사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음.
  -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번도 누군가를 어딘가로 넘겨준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며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넘겨준 적도 없다"며 스노든을 미국에 인도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함.
  - 그는 또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의 대외정보국(SVR) 요원들을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맞교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소개했음.
  - 푸틴은 지난주 핀란드를 방문해 한 기자회견에서도 스노든이 가능한 한 빨리 최종 목적지로 떠나는 것이 러시아는 물론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러 하원, 美 외국공관 도청 활동 강하게 비난>(7/2, 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 지도부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 공관 도청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동맹국 대사관 도청 시스템을 설명할 순 없다"며 "그곳(외국 대사관)엔 테러리스트들이 없으며 그 같은 설명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음.
  - 푸슈코프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시민을 도청하는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명분을 찾도록 내버려 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음. 그동안 러시아의 비민주적 제도를 강하게 비판해온 미국의 불법 행동을 비꼬는 말이었음.
  - 푸슈코프는 이전에도 "포괄적 염탐과 도청이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미 정보당국의 도청 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한바 있음.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



- 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2010년 문건을 인용해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음.
- 도청 대상국에는 미국이 '적대국'으로 여기는 나라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한국과 일본 등 우방도 포함됐음.
  - NSA의 2007년 문건에는 이 정보기관이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을 겨냥한 염탐을 통해 대상국들의 내부 정보와 정책상의 이견 등 회원국 간의 불화를 포착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음.
  - 미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청 사실이 알려진 후 EU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미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사. 중·일 관계

##### ● <중국, ARF서 일본 외무상과만 회담 안 해>(7/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브루나이에서 한국의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접촉을 했지만 유독 일본 외무상과는 접촉하지 않았음.
- 이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역사인식 문제 등에 따른 중국의 반일본 기류가 여전히 강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자관계 해빙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왕이 부장이 브루나이에서 한국 등 15개 국가 및 기구의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3일 전했다.
-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는 아예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우연한 접촉이나 시선 교환도 피했음.
- 지난 3월 취임한 왕이 부장은 이번 ARF를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고 정책노선을 알릴 기회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했지만 일본과는 '거리 띄우기'로 일관한 것임.
- 왕이 부장은 주일대사를 지내는 등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시다 외무상을 주일중국대사관으로 초청한 적도 있어 서로 면식은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센카쿠 문제와 역사인식 등의 현안에 대해 행동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일본이 입으로만 대화를 거론하지 말고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성의있는 실제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 <일본, 중국 동중국해 가스전 단독 개발에 반발>(7/3, 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새 시설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일 정례 회견에서 중·일 양국의 공동 개발 협의 대상인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일본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경계선) 부근에서 중국이 새로운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작업 지점은 중·일 중간선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중국측 해역임. 텐와이텐(일본명: 가시) 가스전에서는 북쪽으로 약 33km 떨어졌음.
- 스가 관방장관은 "동중국해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즉각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런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국은 자기 관할 해역에서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화 대변인은 "소위 중간선이라는 것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다만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분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음.
- 화 대변인은 또 '우호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한 양호한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음.
- 중·일 양국은 2008년 6월 중·일 중간선을 포함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중국측 춘샤오(일본명: 시리카바) 가스전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동중국해 북쪽의 룡징(일본명: 아스나로) 해역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음.
- 하지만 중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단독으로 굴착 작업에 들어갔고, 양국의 조약 체결 교섭은 2010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
- 한편,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과 관련해 일본이 오키나와 제도와 중국 본토간의 중간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중간선보다 오키나와 제도에 가까운 오키나와 해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아. 중·러 관계

##### ● <중·러, 동해서 사상 최대 훈련 돌입>(7/5,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5일부터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포트르대제만 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갔음.
- 이번 훈련에는 모두 18척의 수상함과 잠수함 1척, 특수전 부대 2개 분대가 참가
- 중국은 유도탄 구축함인 선양함, 스자좡함, 우한함, 란저우함, 유도탄 호위함인 엔타이함, 연청함, 종합 보급선인 흥저후함 등 수상함 7척과 함재 헬기 3대, 특수전 부대 1개 분대를 파견
- 러시아 측에서는 수상함 11척, 재래식 잠수함 1척, 항공기 3대, 헬리콥터 1대, 특수전 부대 1개 분대가 참가했음. 12일까지 양측은 해상 및 공중 목표 타격, 잠수함 탐지, 보급, 수색 등 훈련을 함께 받고 공동 열병



- 식도 개최함.
- 중국과 러시아 함정은 훈련 과정에서 탐색·화력통제 레이더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전면 가동한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전했다.
  - 이번 훈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마련된 것임.
  - 외교가에서는 일본과 가까운 포트리대제만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함.
  - 중국은 작년부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이번 훈련이 일본을 비롯한 특정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음.
  - 한편, 일본과 미국은 중·러 연합 해상 훈련과 비슷한 시기 홋카이도에 서 연합 전투기 훈련으로 대응할 예정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